

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  국토교통부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시	2020. 7. 27(월) 총 5매(본문3, 참고2)	
담당부서	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혁신기획팀	담당자	• 팀장 박기범, 사무관 조성국 • ☎ (02) 397-5520
	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	담당자	• 과장 김태경, 사무관 방대혁 • ☎ (044) 201-3778
보도일시		2020년 7월 28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27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공공건축 품격 높이는 「민간전문가 제도 안내서」 발간·배포

- 공공건축 총괄·자문역 민간전문가총괄·공공건축가 제도 안내
- 46개 지자체서 활동 중인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·우수사례 등 소개

□ 매년 5천 동씩 증가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품질 향상을 위해 ‘민간전문가 제도’의 필요성 및 우수사례 등을 담은 「민간전문가 제도(총괄·공공건축가) 안내서」가 발간되었다.

- 국가건축정책위원회(위원장 박인석)와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27일 「민간전문가 제도(총괄·공공건축가) 안내서」를 발간하고 전국 자자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.

□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공건축물은 약 21만 동(2018년 12월 기준)으로 매년 약 5천 동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.

- 공공건축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.
- 하지만 과거 공공기관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 등의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, 획일적이거나 과도한 디자인,

공급자 중심의 계획, 사용자 이용 불편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.

- 결과적으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와 디자인 및 공사 부실 등으로 인해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 저하를 초래하기도 하였다.

□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공건축 관련 기획 및 계획을 전문적으로 총괄·조정·자문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(총괄·공공건축가)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.

- 이를 위해 그동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전국 권역별 설명회,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 등을 해왔으며,
- 그 결과 2020년 7월 6일 기준 민간전문가 제도는 전국 총 243개소 지자체 중 46개소(약 19%)에서 도입하였고, 광역 지자체는 총 17개소 중 11개소(약 65%), 기초 지자체는 총 226개소 중 35개소(약 15%)에서 운영하고 있다.

-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총 829명\* (총괄건축가 35명, 공공건축가 794명)이며, 위촉 현황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누리집(<http://www.npbc.or.kr/trend/page04>)를 통해 지역별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.

\* 광역 지자체(총괄건축가 10명, 공공건축가 571명), 기초 지자체(총괄건축가 25명, 공공건축가 223명)

□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「민간전문가 제도(총괄·공공건축가) 안내서」를 발간·배포하였다.

- 「민간전문가 제도(총괄·공공건축가) 안내서」에는 민간전문가

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과 운영현황, 총괄·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운영, 공공기관의 준비사항, 지자체 우수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.

\* 안내서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누리집(<http://www.pcap.go.kr>, 자료마당→정책자료)에서 확인 가능

○ 「민간전문가 제도(총괄·공공건축가) 안내서」를 통해 아직까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지자체는 적극적인 도입을 독려하고, 이미 위촉한 지자체는 민간전문가 운영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□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은 “좋은 건축이 좋은 도시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만큼, 공공건축부터 품질과 품격을 높여야 하며, 이를 위해서는 민간전문가(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) 제도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
○ 또한 “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좋은 건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”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건축정책기획단 조성국 사무관(☎ 02-397-552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광역 지자체

(단위: 명)

연 번	지 역	계	총괄건축가	공공건축가
계		581	10	571
1	서울	266	1	265
2	부산	43	1	42
3	인천	50	-	50
4	광주	25	1	24
5	대전	50	1	49
6	충남	64	1	63
7	전북	21	1	20
8	전남	1	1	-
9	경북	1	1	-
10	경남	25	1	24
11	제주	35	1	34

□ 기초 지자체

(단위: 명)

연 번	지 역	계	총괄건축가	공공건축가
계		248	25	223
1	서울	은평구	1	-
2		서대문구	1	-
3		강동구	23	-
4	대구	수성구	5	1
5	인천	서구	1	1
6	경기	수원시	12	1
7		성남시	15	1
8		용인시	14	1
9		파주시	5	1
10		포천시	14	-
11		화성시	1	1

연 번	지 역		계	총괄건축가	공공건축가
12	강원	춘천시	11	1	10
13		원주시	12	1	11
14	충북	청주시	1	1	-
15	충남	당진시	6	1	5
16		공주시	1	1	-
17		부여군	7	1	6
18		홍성군	1	1	-
19	전북	전주시	1	1	-
20	전남	순천시	8	-	8
21	경북	경주시	1	1	-
22		영주시	4	1	3
23		구미시	6	1	5
24		의성군	4	1	3
25	경남	창원시	23	1	22
26		진주시	10	1	9
27		김해시	5	1	4
28		사천시	5	-	5
29		양산시	4	-	4
30		통영시	9	-	9
31		남해군	9	1	8
32		거창군	7	-	7
33		창녕군	5	-	5
34		의령군	10	-	10
35		함안군	6	-	6